

**202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예비심사보고서**

교 육 부 소 관

2025. 11.

교 육 위 원 회

>>>

목 차

I. 소관부처 회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
II. 심사경과	1
III.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개요	3
IV. 대체토론의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5
V. 소위원회 심사보고	5
VI. 심사결과	7
VII. 소수의견의 요지	7
VIII. 부대의견	7
※ 불 임 : 교육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수정내역	8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8

202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1.
교육위원회

I. 소관부처 회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교육부 소관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I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9월 3일
2.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7차 교육위원회(2025.11.11.)

- 상정(교육부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2025.11.12.)

· 상정(교육부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심사

○ 제8차 교육위원회(2025.11.14.)

· 상정(교육부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수정의결

Ⅲ. 임대형 민자사업(BTL) 개요

가.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교육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생활기반시설인 국립대 기숙사에 대하여 BTL방식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함.
- 교육부가 2026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 한도액은 전년 대비 1,023억 7,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한도액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한도액 (A)	2026년 한도액안 (B)	증감		2026년 사업내역
			(B-A)	%	
총한도액	-	102,373	102,373	순증	
1. 국가사업	-	102,373	102,373	순증	- 충남대, 강릉원주대, 군산대
2.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	-	-	-	

자료: 교육부

나.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2026년도 교육부 소관의 BTL 정부지급금 규모는 전년 대비 539억 200백만원(38.8%) 증액된 1,929억 5,000만원임.
- 국립대 기숙사 및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414억 7,600만원 (33.9%) 증액된 1,638억 4,200만원이고,
- 전국 초·중·고등학교(국립 제외)의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그린 스마트스쿨 조성사업은 전년 대비 124억 2,600만원(74.5%) 증액된 291억 800만원임.

< 2026년도 교육부 소관 BTL 정부지급금 규모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
소 계	139,048	192,950	53,902	38.8
국립대학 시설확충(국립대학)	122,366	163,842	41,476	33.9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16,682	29,108	12,426	74.5

IV. 대체토론의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생략)

V. 소위원회 심사보고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3억 3,500만원을 감액하고, 598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는 131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2,237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5,033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음.

기금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학진흥기금에서 2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95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음.

그 밖에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영효율화 노력, 기관 사업비 투명성 확보 등 총 8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먼저 주요 감액사업에 관해서,

‘국립대병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당직비 등 총 131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고,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은 사업의 구체화 미흡을 고려하여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음.

다음 주요 증액사업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육성사업’은 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해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의 2개 대학 추가분 800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은 의대 교육 혁신 지원과 지역혁신 허브화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310억원을 증액하였음.

또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1,789억 3,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서 1,093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그 밖에 ‘인문사회기초연구(R&D)’사업에 161억 5,000만원, ‘학생건강 지원강화’ 사업에 72억원을 증액하였음.

VI. 심사결과

(원안의결)

VII.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VIII. 부대의견

(붙임 참조)

※ 붙임 : 교육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수정내역

I . 교육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가. 교육부

1.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 변동액 없음

IV. 부대의견

가. 교육부

- 교육부는 재외한국학교 운영비와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외한국학교의 유치원·초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교육부는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사업에 따라 전문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재외한국교육원과 재외한국학교의 운영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의 연수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평가를 즉시 실시하고, 외유성 연수 및 특혜성 시상 등 예산낭비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의 ‘고급관리자반’ 등 장기연수 과정에 대하여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마련, 연수비용 대비 정책·조직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구축한다.
-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의 체력단련비, 상품권 등 비본질적 경비를 축소하고, 현장교원 및 일선 관리자 대상의 정책연계형 실무교육으로 재편한다.

- 교육부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의 재정 악화, 인사권 남용, 회계 부정 의혹 등에 대하여 교육부 차원의 현장 조사 또는 감사가 필요한지 검토한다.
-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 사업 관련하여 파견교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캄보디아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는 대면 파견의 사업 방식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적극 검토한다.
- 교육부는 늘봄지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사 등 실무인력을 충원하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 교육부는 기존 교육기부활성화 사업 개편으로 인해 교육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규 사업 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를 거친다.
- 교육부는 학생 자살 등 정신건강 위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중앙 차원의 정책 설계·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정신건강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지방의 마음건강증진센터 등과 연계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체계적 분업 구조를 마련한다.
-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위클래스 운영비의 현실화 및 추가지원을 위한 방안과 위센터 지원 확대 및 행정처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집행한다.
- 교육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수요포럼 진행에 집행한 바 있으므로, '24~'25년 동안 집행된 수요포럼 소요 예산 1,171만 3,050원을 회수한다.
- 교육부는 향후 자살학생 심리부검을 위한 전문성 있는 인력 위촉 계획, 심리부검 결과에 대한 활용 방안(상담방식 및 자살예방 대책 수립 등 적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서 의원실에 보고한다.
-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하여 재원부담 주체들의 재정 여건, 현행법 취지 및 일몰기한, 교육재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교육의 중립성 확립을 위해 학교 내 강사 및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교육부는 학교급식종사자의 폐암 등 산업 재해 예방 목적의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점검·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 교육부는 비정규직 학교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이 적정 규모의 식생활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체협상 등 반영 내역을 국회에 보고 한다.

- 교육부는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방향을 수정하고 외국학생 유치방안 마련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 교육부는 AIDT로 수업혁신을 선도해 온 교사들이 그 노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의 수상 기준 및 절차에서 AIDT 분과의 기여도를 적극 반영하고 사업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한다.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등 종사자의 기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수당 인상 및 처우 개선, 소송 지원, 인력 확대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표준유아교육비 산정에 있어 정책연구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 간 시점 차이가 존재해 적절 지원단가가 산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표준유아교육비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단가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표준보육비용과 표준유아교육비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률에 규정된 표준보육비용 조사가 주기에 따라 적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비용 구조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 시 표준유아교육비 조사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유보통합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교사 대 0세반 아동비율 1:2 개선으로 0세반 공급 부족이나 시설면

적 감소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누리과정 교육·보육의 질적 향상과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만 3세까지 추가보육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체 시·도교육청이 만 3세 추가보육료를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대학생 근로장학금 수요에 맞게 지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교내외 근로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학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학교 조리실의 업무환경 개선과 학교급식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한다.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임금 수준 및 근로 형태 등을 파악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향을 정책연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중앙부처 공무원직과 명절상여금 차이 해소,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대책 등 교육공무원직처우개선 관련한 대책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 유괴 및 유괴미수 사건, 외부인 학교 침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학교 안전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바, 학교 외부 CCTV 미설치 학교에 즉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안

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학교 내 보차도 미분리 학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와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 및 예산집행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안전실태조사’에 학교 밖 등하굣길 구간 안전 실태조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전체 시도교육청이 분리지도 관련 수당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청소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한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전문상담사 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상임감사의 고액의 교육비 사용, 외유성 해외출장에 대해 제한하는 내규를 마련하도록 관리·감독한다.

- 국립대학육성사업의 내역사업인 AI거점대학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정책연구개발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구체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공개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조교의 고용과 처우에 관한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 또는 대학과 협의하여 조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련 교육부는 2026년 적시에 장려금이 지급되도록 학부생 장려금의 대학·학생 선정 기준 및 절차, 그리고 교수(멘토) 1인당 학부생 4명 밀착지도 체계를 위한 멘토 선정 기준·활동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한다.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관련 교육부는 우수 인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장려금 지급 배분을 학교당 일괄 배분하는 형식보다 재학생 수 및 연구실적 등에 기반해 지급하도록 검토한다.
- 교육부는 발표한 AI 인재양성방안을 원활히 수행하여 국정과제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교육부는 ‘이공 우수인재 성장경로 지원’ 사업과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의 집행 효율성과 정책 설계의

지속성을 위해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운영실태 점검이 이뤄진 3개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수 등 조치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RISE’ 등으로 확대된 대학 지원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시·도간 배분 방식이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 교육부는 국립대 글로벌대학 예산의 국립대학육성사업 편성, RISE 예산 집행 규정의 정비, RISE 증액분의 국가중심 국립대 지원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노력한다.
- 교육부는 RISE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평가 권한이 지자체에 집중되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대학이 단순 수행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교육부는 RISE 사업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대학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대학의 기존 자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문제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 및 향후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수립한다.

- 교육부는 정권이나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사업이 급격히 변경되어 대학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RISE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BRIDGE 사업의 성과를 그대로 RISE 체계에서 계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대학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 및 경영위기 대학의 RISE 사업 참여가 일반화되거나 확대될 경우, 이는 대학기관평가 인증제도의 신뢰 하락과 일반재정지원 제한 등 기존 대학정책과의 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RISE 사업 참여 기관평가 미인증 대학에 대한 사업 참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비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건정성에 따라 지원되는 국고액(사업비)에 대한 의무매칭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재정 배분 계획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RISE 사업 예산서에 교부조건에 따른 예산 배분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나 배분기준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RISE로 이관된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 등을 감안하여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 교육부는 RISE 보조금 교부조건에 중앙정부 정책과제를 명시하는 경우, 그 조건을 사전 공개·제시하여 국회의 세부 심사·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대학이 사업비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운영비, 인건비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교육부 방침 및 여러 차례 호소에도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한 국립대의 현황을 참고하여 국립 대학육성사업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
-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정책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국립대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정책이 단순한 예산 퍼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 사립대학과의 상생 대안 역시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2026년 적시에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AI/SW 분야 학과선정과 대출 실행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비수도권 대학 특성화 인센티브 세부계획 수립 시, 개별 대학이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단기적 학과 구조개편을 추진할 수 있음을 고려하고, 글로벌대학 등 기존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장기적인 재원 투입이 예정된 만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구중심대학 혁신을 뒷받침할 우수교원 확보 등 보완 제도의 이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거점국립대 지원사업과 별도로 편성된 ‘연구중심대학 인센티브 사업’ 등 연관된 타 사업들의 구체적인 세부내역이나 배분 기준 등을 제공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거점국립대학 집중 육성 사업은 연구중심대학 사업, RISE 사업, 글로벌대학 사업, AI 거점대학 사업 등을 각 사업추진체계가 상이함에 따라 중복 투자 또는 투자 공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각 사업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 내역, 시행령 최종안 마련 등 추진 일정 진행 시 의원실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사업 결과분석, 전문가 자문 및 현장 의견 수렴, 대학 구

조개선 기본계획 초안 마련 등 추진 일정 진행 시 의원실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음악교과의 기본이수과목 중 국악 이수를 의무화하는 고시개정을 추진한다.
-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지원 등을 포함한 초등교원과 중등 음악교원에 대한 국악 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교육부는 출연금을 지급 받는 법인화된 국립대학(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이 경영효율화 노력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국립국제교육원의 연수 실시에 대한 객관적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연수 성과를 평가한다.
-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수수료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 교육부와 한국고전번역원은 인문고전 불전사기 신규 번역사업 준비를 위해 번역 대상의 원문 검토 및 원전 정리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 교육부는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사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내실있게 추진한다.
-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기관장이 기관 고유 목적 및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도한 출장과 외부강의

등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 교육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일반회계로 편성된 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이 2027년도 예산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출연금 사업 중 경상경비의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에 교부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국립대육성사업, RISE, 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등의 사업관리비가 기관 이사장의 여비 등에 불필요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결산 시 그 집행내역을 국회에 보고한다.

나. 국가교육위원회

-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국가교육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조직 확대를 위한 직제규정이 개정되면 내년 초부터 즉각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하므로 2026년도 본예산에 추가되는 인건비 편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